

국토정책 Brief

국토연구원에서 수행한 주요 연구과제의 핵심 내용과 정책제안 등을 압축해 국민께 알려드리고자 하는 발간물입니다.



2023. 1. 9.
No. 899

발행처 국토연구원
발행인 강현수
www.krihs.re.kr

인구감소시대의 체류인구 도입 필요성과 정책 방안

주요 내용

- 1 사회 구성원의 이동성 증가와 정주패턴의 변화로 주민등록인구로 대표되는 정주인구에 대한 대안적 접근의 필요성이 고조되면서 생활인구(서울, 제주), 서비스인구(부산), 관계인구(전남) 등의 인구개념 등장
- 2 '인구감소시대 정주인구만이 지역발전을 위한 유일한 해답인가'라는 문제의식 속 정주인구에 대한 대안적 접근으로 "주민등록 신고를 하지 않은 특정 지역에서 1박 이상 머무는 인구"로 체류인구의 개념 설정
- 3 체류기간을 고려한 체류인구 규모 산출 방법(time × person)을 제시하여 체류인구의 강도, 계절성, 지속 기간, 정주인구 대비 체류인구 비중을 도출함으로써 국토공간의 체류지역 유형화
- 4 다섯 가지 체류지역 유형(거점형, 계절형, 과소형, 목적형, 과밀형) 구분 결과를 바탕으로 지역유형별 체류 양상, 지역과의 관계 형성 과정, 지역과의 상호영향 등 도출
- 5 체류인구는 지역사회와 상호작용을 통해 맺는 관계의 정도에 따라 지역 연계형 체류인구로 발전할 수 있으며, 경제적, 사회적, 문화적 관점에서 지역사회의 주요 자원으로 기여 가능

정책제안

- 1 관광객으로 대표되는 방문인구, 주민등록인구로 대표되는 정주인구와 차별화된 체류인구 육성 및 활성화를 위해 '기반 조성 - 확대 - 지역 연계성 강화'로 구분하여 국가, 지역, 민간 단위의 체계적이고 종합적인 정책추진 필요
- 2 국가 공통의 정책과 지역 특성에 바탕을 둔 지역유형별 정책 간 조화 추구
- 3 지역유지를 위해 체류인구를 수단화한다거나 체류인구 유인을 위해 지역을 수동적 주체로 접근하는 태도를 지양하며, 체류인구와 지역 간 상생 관점의 접근 필요

01. 비정주인구로서 체류인구의 의의

총인구가 증가하지 않는 인구감소시대에 정주인구 중심의 정책만으로는 지방소멸 문제 해결 한계

인구집중과 인구과소는 다양한 사회적 문제로 이어지기 때문에 이를 해결하기 위한 인구 분산 정책의 목표는 정주인구의 지역적 재배치임(보건복지부·한양대학교 고령사회연구원 2018, 14)

- 인구감소시대 지자체의 정주인구 유지 및 유입을 위한 정책은 국가 전체적으로 보면 주변 지역 간에 인구를 뺏고 빼앗기는 제로섬 게임에 불과(박진경 외 2020)
- 지역유지를 위한 안정적인 인구 규모가 붕괴되면서 지역경제 침체, 정주여건 악화 등 지역의 인구 유출을 더욱 가속화하는 악순환 형성(이상림 외 2018)

인구감소시대에 각 지역의 정주인구가 감소하더라도 지역사회가 유지될 수 있는 방안에 대한 고민이 필요한 시점

- 지방으로의 이주에 대한 물리적, 심리적 부담 속에서 인구감소시대의 대안적 인적자원으로 비정주인구의 가능성을 고찰하고, 정주인구 중심에서 벗어난 다양한 관점의 인구정책 모색 필요

체류인구의 개념

관광객으로 대표되는 방문인구와 주민등록인구로 대표되는 정주인구 사이의 중간단계로 방문-체류-정주 개념모델을 적용해 체류인구에 대한 개념 설정

- (체류인구) 주민등록을 하지 않은 특정 지역에서 1박 이상 머무르는 인구
 - 1박 이상이라는 시간축 적용
- (지역연계형 체류인구) 주민등록을 하지 않은 특정 지역에서 1박 이상 머무르는 인구 중 지역에 관심을 갖고 다양한 범위의 경험을 통해 지역과 관계를 형성하는 인구
 - 시간축과 지역연계축 적용

그림 1 방문-체류-정주 단계의 개념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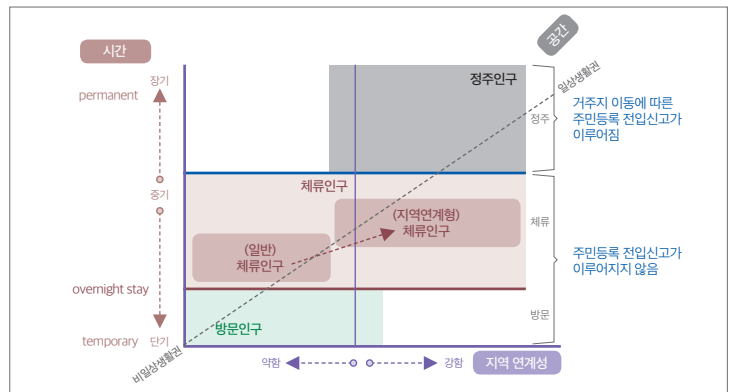


표 1 관광 방문인구와 체류인구, 정주인구의 특성

구분	관광 방문인구	체류인구	정주인구
주소지 변경	주민등록 주소지에 대한 변경 없음	주민등록 주소지에 대한 변경 없음	30일 이상 거주할 목적으로 그 관할 구역에 주소나 거주지를 등록
목적 및 목적지	소비(비보수 활동) 비일상생활권	생산, 교육, 소비(보수, 비보수 활동 포괄) 일상생활권, 비일상생활권 포괄	거주 일상생활권
기간	비영구적(당일)	비영구적(1박 이상~)	영구적
빈도	'더 자주, 많이, 가깝게' 추구 경향 확대	일회적 또는 반복적인 사건	일회성
계절성	뚜렷한 계절적 절정기 (주말, 공휴일, 휴가철, 학기 중 방학 등)	비일상생활권으로의 이동은 계절성을 지니지만 일상생활을 위한 이동은 다소 고르게 일어남	일 년 내내 다소 고르게 일어남
지역 연계성	약함 (동반자 및 다른 여행자와의 관계에 중점)	약하거나 중간 (지역, 지역주민과 다양한 깊이의 관계 형성 가능)	강함
영향	지역 경제적 기여 중점	지역 경제적 기여 + 사회·문화적, 환경적, 혁신자원 등 다양한 측면으로 지역사회 기여 가능	한 지역에서 다른 지역으로 인구 재분배, 누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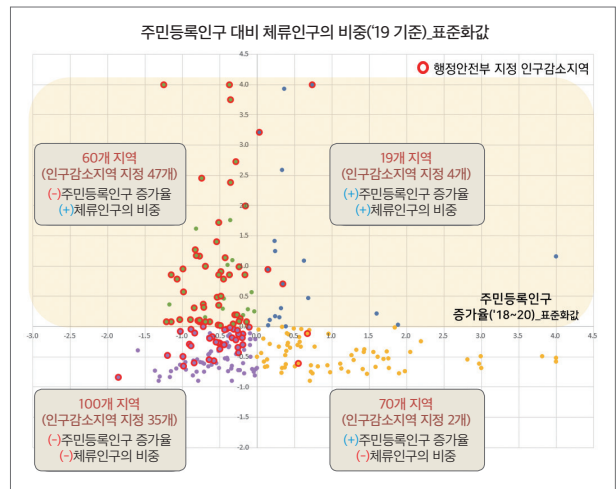
자료: 선행연구를 토대로 저자 작성.

지역은 정주인구 외 체류인구를 반영한 인구관리 전략 필요

인구감소시대에는 기존 인구 유입방식에서 벗어나 외부자원으로 체류인구도 함께 고려할 필요가 있지만 관련된 정책·계획적 접근은 미흡한 실정

- 주민등록인구와 해당 지역에 실제 거주하고 있는 인구 사이의 미스매칭에 대한 문제의식이 확산되며 국내·외에서 다양한 대안적 인구개념 등장
 - (서울, 부산, 제주 등) 주민등록인구보다 밀집된 실제 인구를 위해 발생하는 문제를 관리하기 위해 생활인구, 서비스인구 등의 인구개념 도입
 - (전북, 전남 등) 인구감소에 대응하고 지역유지를 위해 체류인구 및 관계인구 등 새로운 인구개념 제시
- 주민등록인구 대비 체류인구의 비중이 높은 지역은 총 79개의 기초지자체가 해당되며, 이 중 2021년 행정안전부의 인구감소지역으로 지정된 곳은 64.6%(51개) 수준
 - 특히 이들 지역을 중심으로 체류인구가 지역 사회의 자원이 되는 방안 모색이 필요하다고 판단

그림 2 체류인구, 주민등록인구와 행안부 지정 인구감소지역



주: 본 분석에서는 울릉군을 제외하였기 때문에 2021년 행안부 지정 인구감소지역 89곳 중에서 울릉군을 제외한 나머지 88개를 제시함.
자료: KT(2021) 및 행정안전부(2022) 데이터를 활용하여 분석.

02. 체류인구의 현황 및 체류지역 유형 구분

체류인구의 규모 측정 방법

체류인구 현황분석 및 체류지역 유형 구분을 위해 등록된 거주지의 변경 없이, 단기이동을 통해 일상생활권(거주, 통근·통학 등)을 벗어나 1박 이상 한 지역에서 머물고 있는 인구를 체류인구로 정의

- 이번 연구는 인구감소로 인한 지역위기라는 이슈에서 체류인구에 대해 주목하였기 때문에 거주, 통근·통학 등 일상생활이 이루어지는 행정구역을 넘어선 즉, 비일상생활권으로의 이동을 대상으로 적용
- KT이동통신사(이하 KT)의 외지인방문자 데이터 중 당일방문 외지인방문자는 방문인구로, 1박 이상의 숙박 외지인방문자는 체류인구로, 행정안전부의 주민등록인구 데이터는 정주인구로 구분하여 분석에 활용
 - KT의 외지인방문자 데이터는 일상생활권에 해당하는 광역지자체를 벗어나 한 장소에 일정 시간(30분) 이상 머무른 사람을 집계한 데이터
- 이동방식이 타 지역과 다른 울릉군을 제외한 전국 249개의 시·군·구를 대상으로 코로나19로 인해 이동 제한 조치가 시행되기 이전인 2019년 데이터를 중점적으로 활용

체류인구의 지역 영향을 고려하기 위해서는 '체류자의 수'와 함께 '체류기간' 반영 필요

- 체류기간을 반영하지 않을 경우 한 지역에 하루 머문 사람도 1명, 한 달을 머문 사람도 1명으로 동일하게 집계되어 체류인구가 지역에 미칠 수 있는 직·간접적인 영향의 크기를 고려하기 어렵기 때문
- 체류인구는 KT 데이터의 숙박 외지인방문자의 수에 체류기간을 적용하고 이를 365로 나누어 2019년 한 해 동안 지역별 체류인구의 규모를 산출

* 기타 구체적인 분석방법은 본 보고서를 참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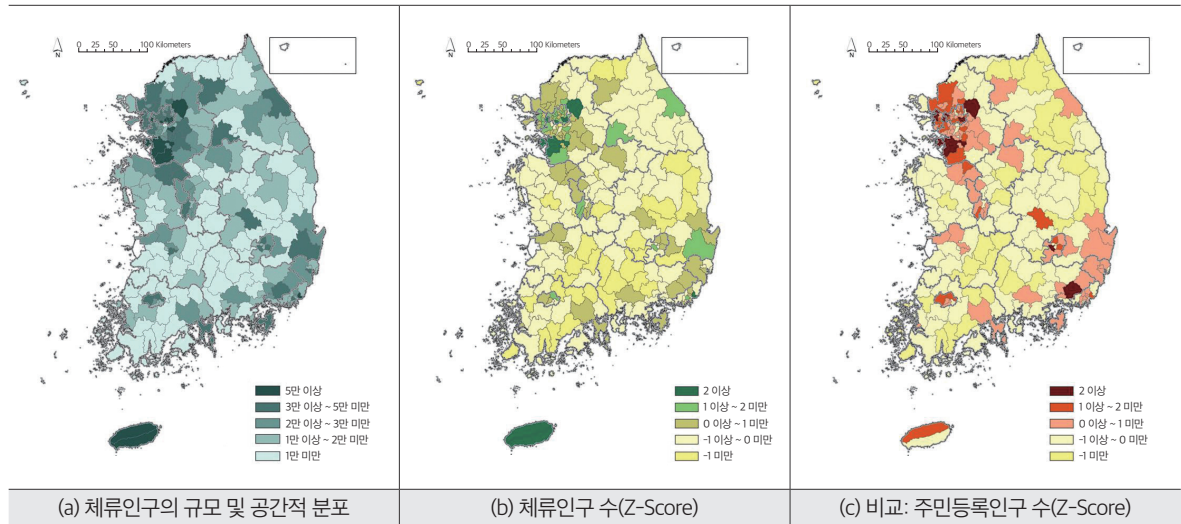
단기 이동의 시·공간적 차원에 따른 속성을 변수화하여 체류인구의 강도(공간적 분포), 계절성, 지속기간, 비중 등에 대한 현황을 분석, 현황 분석 결과에 방문인구와 정주인구 관련 데이터를 추가하여 체류지역 유형을 구분

정주인구가 밀집한 도시지역으로 체류인구도 밀집하고, 체류기간도 긴 것으로 관찰

(체류인구의 강도) 체류인구가 단기적(계절적)으로 인구분산 및 역도시화 효과를 가져온다는 일부 해외사례(핀란드, 프랑스)의 결과와는 달리 우리나라는 정주인구가 많은 지역이 체류인구도 많은 것으로 분석

- 2019년 한 해 동안 일평균 체류인구의 수가 가장 높은 지역은 제주시(95,817명, 제주시 주민등록인구의 19.6% 수준), 서울 강남구(77,297명, 14.2%), 경기 화성시(76,411명, 9.4%), 서울 송파구(69,534명, 10.3%), 제주 서귀포시(69,062명, 38%) 순으로 나타남
- 제주도를 제외하고는 모두 수도권 내 정주인구의 수가 높은 지역으로 체류인구도 밀집하는 양상

그림 3 체류인구의 규모와 공간적 분포, 정주인구(주민등록인구)와의 비교



자료: KT(2021) 및 행정안전부(2022) 데이터를 활용하여 저자 작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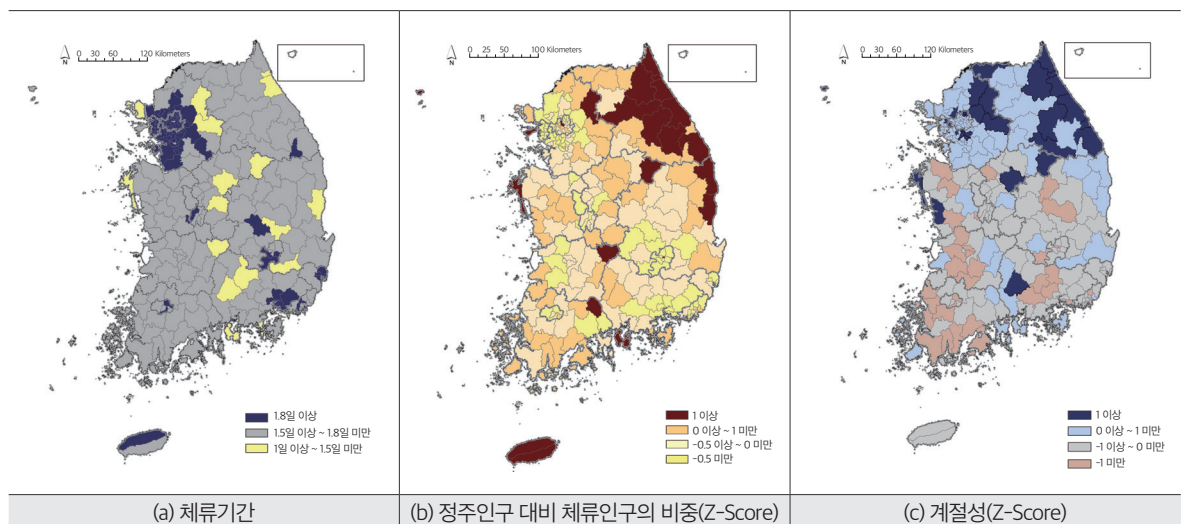
(체류기간) 도시지역이 농어촌지역보다 긴 것으로 나타나 도시지역이 체류인구를 유인하는 요소 또는 체류 인프라가 농어촌지역에 비해 경쟁력이 있는 것으로 판단

- 농어촌지역의 체류 유인요소 및 체류 인프라 개발이 필요함을 시사하며 그 개발 방향에 대한 고민 필요

(정주인구 대비 체류인구의 비중) 도시지역(시·구)보다 농어촌지역(군)을 중심으로 높게 나타나 지역의 인적자원으로서 체류인구와 지역 간 상생적 활용관계 구축 필요

(계절성) 정주인구 밀집지역과 국내 주요 여름휴가 목적지인 강원도, 충청 해안권을 중심으로 계절성이 높은 것으로 분석

그림 4 체류인구의 지역별 체류기간, 체류인구의 비중, 계절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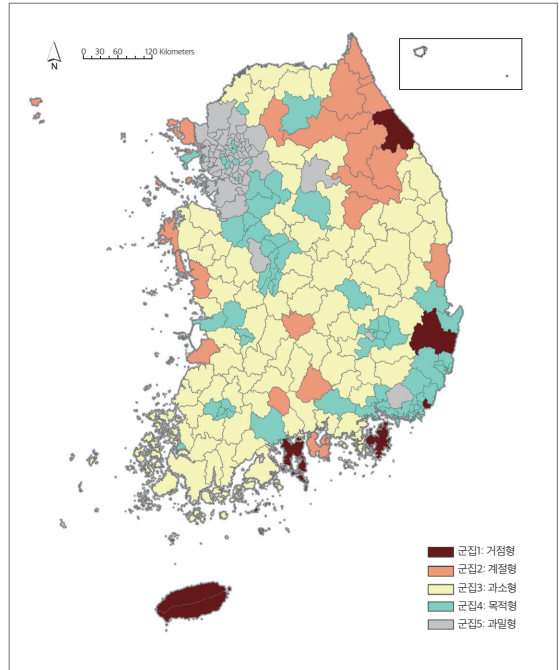
자료: KT(2021) 데이터를 활용하여 저자 작성.

체류인구의 시·공간적 속성을 기반으로 국토공간을 5개의 유형으로 구분

전국 249개(울릉군 제외) 기초지자체에 대해 체류인구 시·공간적 속성 관련 변수와 방문 및 정주인구 관련 변수를 활용해 K-means 군집분석으로 지역유형을 구분한 결과 5개의 유형으로 구분

- (거점형) 체류인구의 수가 가장 많고, 당일 방문보다 1박 이상 숙박 체류 비중이 높음
- (계절형) 정주인구 대비 체류인구의 비중과 계절성이 가장 높음
- (과소형) 체류보다는 당일방문의 비중이 높으며, 체류인구 수, 정주인구 수가 모두 적어 지역 내 인구의 흐름 자체가 다른 유형에 비해 부족함
 - * 과소형에 해당하는 86개 지역 중, 75.6%(65개) 지역이 2021년 행안부 지정 인구감소지역에 속하는 것으로 나타남
- (목적형) 평균 당일방문시간이 가장 짧아 명확한 목적으로 해당지역을 방문하고 그 행위만 수행 후 바로 빠져나가는 행태가 주를 이룸
- (과밀형) 체류기간이 가장 길 뿐만 아니라 정주인구와 체류인구의 수도 모두 많음

그림 5 체류인구 특성에 기반한 체류지역 유형 구분 결과



자료: KT(2021) 및 행정안전부(2022) 데이터를 활용하여 저자 작성.

표 2 체류지역 유형화 결과

유형	해당 지역
거점형 (n=7)	해운대구, 강릉시, 여주시, 경주시, 거제시, 제주시, 서귀포시
계절형 (n=20)	강화군, 용진군, 가평군, 속초시, 홍천군, 영월군, 평창군, 정선군, 인제군, 고성군(강원), 양양군, 단양군, 보령시, 태안군, 무주군, 부안군, 구례군, 영덕군, 남해군, 산청군
과소형 (n=86)	중구(부산), 포천시, 여주시, 연천군, 양평군, 동해시, 태백시, 삼척시, 횡성군, 철원군, 화천군, 양구군, 제천시, 보은군, 옥천군, 영동군, 증평군, 진천군, 괴산군, 음성군, 공주시, 서산시, 논산시, 계룡시, 당진시, 금산군, 부여군, 서천군, 청양군, 홍성군, 예산군, 정읍시, 남원시, 김제시, 완주군, 진안군, 장수군, 임실군, 순창군, 고창군, 나주시, 광양시, 담양군, 곡성군, 고흥군, 보성군, 화순군, 장흥군, 강진군, 해남군, 영암군, 무안군, 함평군, 영광군, 장성군, 완도군, 진도군, 신안군, 김천시, 안동시, 영주시, 영천시, 상주시, 문경시, 군위군, 의성군, 청송군, 영양군, 청도군, 고령군, 성주군, 칠곡군, 예천군, 봉화군, 울진군, 통영시, 사천시, 밀양시, 의령군, 함안군, 창녕군, 고성군(경남), 하동군, 함양군, 거창군, 함천군
목적형 (n=76)	종로구, 중구(서울), 용산구, 서구(부산), 동구(부산), 영도구, 부산진구, 동래구, 남구(부산), 북구(부산), 사하구, 금정구, 강서구(부산), 연제구, 수영구, 사상구, 기장군, 중구(대구), 동구(대구), 서구(대구), 남구(대구), 북구(대구), 수성구, 달성군, 중구(인천), 동구(인천), 동구(광주), 서구(광주), 남구(광주), 북구(광주), 광산구, 동구(대전), 중구(대전), 서구(대전), 유성구, 대덕구, 중구(울산), 남구(울산), 동구(울산), 북구(울산), 울주군, 수원시 팔달구, 성남시 중원구, 안양시 만안구, 광명시, 동두천시, 과천시, 용인시 처인구, 이천시, 안성시, 춘천시, 청주시 상당구, 청주시 서원구, 청주시 흥덕구, 청주시 청원구, 충주시, 천안시 동남구, 천안시 서북구, 아산시, 전주시 완산구, 전주시 덕진구, 군산시, 익산시, 목포시, 순천시, 포항시 남구, 포항시 북구, 구미시, 경산시, 창원시 의창구, 창원시 성산구, 창원시 마산합포구, 창원시 마산회원구, 창원시 진해구, 진주시, 양산시
과밀형 (n=60)	성동구, 광진구, 동대문구, 중랑구, 성북구, 강북구, 도봉구, 노원구, 은평구, 서대문구, 마포구, 양천구, 강서구(서울), 구로구, 금천구, 영등포구, 동작구, 관악구, 서초구, 강남구, 송파구, 강동구, 달서구, 미추홀구, 연수구, 남동구, 부평구, 계양구, 서구(인천), 세종, 수원시 장안구, 수원시 권선구, 수원시 영통구, 성남시 수정구, 성남시 분당구, 의정부시, 안양시 동안구, 부천시, 평택시, 안산시 상록구, 안산시 단원구, 고양시 덕양구, 고양시 일산동구, 고양시 일산서구, 구리시, 남양주시, 오산시, 시흥시, 군포시, 의왕시, 하남시, 용인시 기흥구, 용인시 수지구, 파주시, 김포시, 화성시, 광주시, 양주시, 원주시, 김해시

자료: 저자 작성.

03. 체류인구의 지역 영향

사례연구 개요

지역사회와 체류인구의 상호 영향에 대한 사회적 자본 관점을 적용하여 심층 사례연구를 진행

- 정주인구 대비 체류인구의 비중이 높은 3개의 지역유형(거점형, 계절형, 과소형)을 대상으로 각 유형별 주요 사례대상지 2~3곳씩 선정하여 총 7개의 사례연구를 진행
- (거점형) 서귀포시, 강릉시, (계절형) 양양군, 단양군, (과소형) 공주시, 완주군, 홍성군

지역유형별 체류인구와 지역 간 관계 형성 및 지역사회에 영향을 미치는 부분은 상이

(거점형) 로컬크리에이터·스타트업의 혁신자본을 연결하는 네트워크 기획의 역할이 교량적 사회적 자본 형성에 기여

표 3 거점형 체류지역의 사회적 자본 관점 적용

관점	내용
제도적 관점	(로컬크리에이터 및 스타트업 육성·확산·연계) 중기부 로컬크리에이터 - (강원, 제주) 창조경제혁신센터와 같이 중앙 및 지방정부의 로컬크리에이터 관련 다양한 사업 추진 → 로컬크리에이터·스타트업과 지역사회와의 연계를 위한 기반 형성
연계성 관점	(네트워크 기획자의 교량적 사회적 자본 기여) 지역의 네트워크 기획자가 주축이 되어 외부자원과 지역사회 간 네트워크 형성에 기여하고, 이 과정 속에서 스타트업은 지역의 문제를 비즈니스로 연결하며 사업모델 창출
시너지 관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체류인구는 라이프스타일 비즈니스에 대한 콘텐츠 수요자로 라이프스타일 비즈니스 생태계 구축에 기여 → 지역 콘텐츠 다양성 확장과 가치 증진 • 지역 라이프스타일 기반의 위케이션, 지역살이 등 다양한 체류활동을 목적으로 체류인구가 유입 → 잠시 보고 머물다 가는 관광지에서 지역 고유의 라이프스타일을 경험할 수 있는 목적지로 변화

자료: 저자 작성

(계절형) 체류활동 기반 관련 정부의 지속적인 정책지원과 체류인구가 지역에 도움이 된다는 지역주민의 신뢰를 바탕으로 교량적 사회적 자본이 형성되고, 민간은 사업체 운영을 통해 체류인구 유입 기반 형성

표 4 계절형 체류지역의 사회적 자본 관점 적용

관점	내용
제도적 관점	(체류활동 관련 콘텐츠에 대한 정부의 적극적이고 지속적인 지원) 양양군의 경우 군사제한구역 공유수면점유 사용을 민간에게 최초로 허가, 서핑의 잠재력을 발견한 후 서프시티 기반 조성을 위한 서핑비치로드 조성사업, 서핑해안레저 특화구역 조성사업, 스마트관광도시 조성사업 등 진행 중이며, 단양군 가곡면은 농촌개발 관련 사업을 지속적으로 수행하며 농촌체험마을 기반 구축
연계성 관점	(공동체 내부에서 외부자원에 대한 교량적 사회적 자본 형성) 부정적 외부효과가 발생할 정도의 강한 내부 결합적 공동체 조직 속에 외부인의 유입을 통한 지역발전을 경험하며 외부자원에 대한 교량적 사회적 자본의 형성 시작 → 특정 조직 및 단체가 주축이 되기보다는 정부의 지속적인 정책지원과 민간의 경제적 활동을 통해 지역사회 속에서 자연스럽게 체류인구와의 교류 형성
시너지 관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체류활동과 지역 주요 경제활동과의 연계를 통한 경제적 효과 창출 • 체류인구는 체류활동을 위한 지속적인 지역 방문을 통해 지역연계형 체류인구로 발전 • 지역과 체류인구 간 지식과 경험을 공유하며 지역사회 구성원의 인식 변화

자료: 저자 작성

(과소형) 완충지대 역할의 중간조직을 매개로 지역사회와 체류인구 간 네트워크 결합기회 형성

표 5 과소형 체류지역의 사회적 자본 관점 적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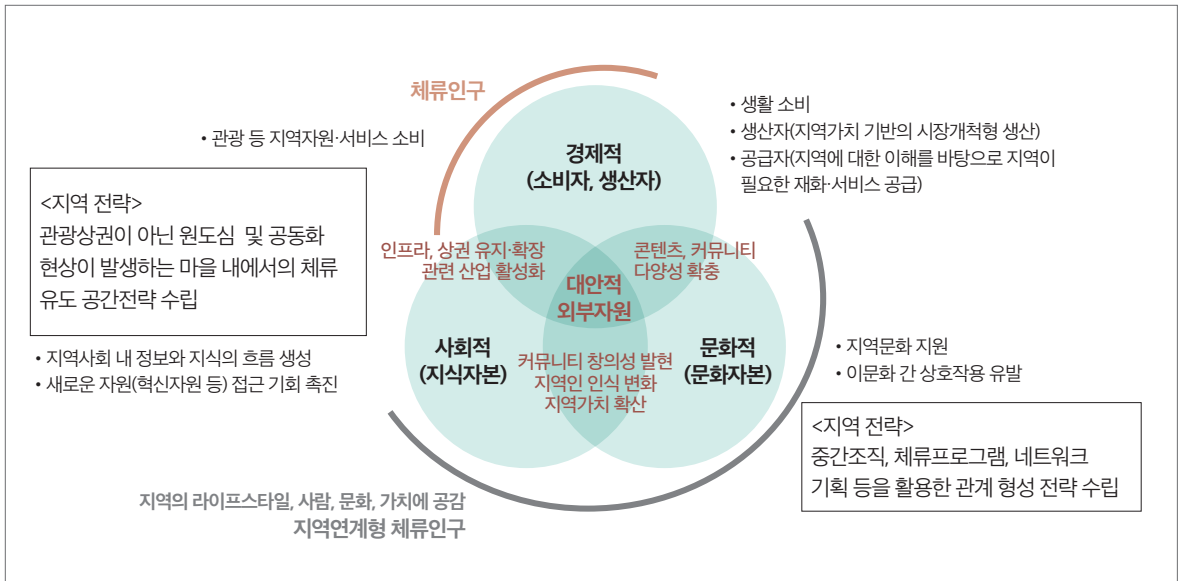
관점	내용
제도적 관점	(농어촌 및 소도시의 살아보기 사업의 활발한 추진) 부서별 관광홍보, 청년유입, 귀농귀촌 장려, 지역이주 경험 등 다양한 목적으로 지역체험을 제공하기 위한 다양한 사업 시행
연계성 관점	(어느 정도 결속력을 지닌 결합적·사회적 자본 속 중간조직을 매개로 네트워크 결합기회 형성) 중간조직의 성향에 따라 강도의 차이는 있으나 중간조직을 매개로 체류인구와 지역 간 관계 형성 (공주: 어느 정도 안전한 접점 위주로 오픈, 홍성: 지역의 삶을 그대로 체험, 완주: 중간조직이 완충지대로서 역할)
시너지 관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지역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체류인구는 지역연계형 체류인구로 발전하며 지역에서 필요로 하는 재화·서비스 공급자가 되거나 지역에서 새로운 가치를 발견하여 시장개척형 생산자가 되는 등 체류인구와 지역 간 상호보완 관계 형성 • 지역기반 산업의 부가가치 증진 및 커뮤니티의 다양성 확장 기회 제공, 지역사회에 새로운 시각 제공

자료: 저자 작성

체류인구는 경제적, 사회적, 문화적 관점에서 지역의 외부자원으로 가능성을 지님

- (체류인구) 기본적으로 지역의 수요자 역할을 하며, 단순하게 지역 어메니티를 소비하는 소비행이 적합하지, 지방을 또 다른 생활의 공간으로 활용하는 다거점 거주자형이 적합한지 모색 가능
 - 지역은 체류공간을 마을의 유희자원과 연계하여 체류인구가 관광상권이나 외곽이 아닌, 마을 내에서 체류하며 정주민구와 비슷한 생활 소비가 가능하도록 공간전략 구사 필요
- (지역연계형 체류인구) 일반 재화 및 서비스 제공 또는 지역가치 기반의 창업 등 공급자 역할과 지역사회와 정보, 지식, 관점, 경험을 교류하며 지식을 확산시키는 지식자본 역할 수행이 가능하며 이 과정 속에서 지역 콘텐츠, 커뮤니티, 네트워크 등에 대한 다양성 확장, 커뮤니티의 창의성 발현 가능성 보유
 - 지역은 체류인구와 지역 간 관계를 형성할 수 있는 전략 구사가 필요하며 그 내용으로는 중간조직, 체류프로그램, 네트워크 기획 등이 해당

그림 6 체류인구와 지역의 영향, 필요 전략



자료: 저자 작성.

체류인구의 육성 및 활성화와 관련된 주요 이슈

(공통) 공간과 정보 제공 필요

- 장기체류를 위한 숙박공간, 워케이션을 위한 업무공간, 창업 및 체험공간 등 공간수요의 유형은 지역에 따라 다르지만 관련 제도상 지역 내 유희공간을 체류인구 유입과 관련하여 활용하기 어려운 공통점 보유
- 관광객을 위한 관광정보와 달리 장기체류는 정주민구와 유사한 수준의 지역 내 생활정보 및 생활물품을 필요로 하나 이에 대한 체계적인 정보 제공 창구가 부족
- 장기간 정주공간을 벗어나도 교육·근로 측면에서 불이익이 느껴지지 않도록 체류여건이 조성되지 않는 한 체류인구는 특정계층(젊은층, 싱글)을 중심으로 발생하며 로컬 지향의 흐름 확산에 한계 야기

(거점형) 체류인구를 마을 내 체류시킬 수 있는 강력한 유인요소 창출 및 제도적 정비 필요

- 해당 지역 자체(예: 서귀포시)로 방문 및 체류하는 인구가 많더라도 마을(예: 서귀포시 내 OO마을) 내부가 아닌 외부 인프라(호텔, 리조트 등)에서 체류하기 때문에 마을 단위의 공동화 현상을 해결하는 데 한계

(계절형) 체류활동을 고려한 기반시설 확충과 지역주민의 체류 중점 콘텐츠 향유 필요

- 체류활동에 대해 지역주민이 이질성을 갖거나 향유하지 않을 경우 체류인구와 지역사회 관계 형성에 한계

(과소형) 소도시 및 농어촌 체류기회 제공의 필요

- 연고나 지인이 없는 소도시 및 농어촌의 경우 단순한 관광 방문인구가 아닌 지역연계형 체류인구로 지역사회에 진입하기 어려우며, 지역사회와 도시에서 유입된 체류인구 간 문화충돌 및 거부감은 체류인구와 지역 간 관계 형성에 한계로 작용

04. 체류인구와 지역 간 상호보완 관계 형성을 위한 전략

체류인구 관련 정책 도입을 위해 ① 기반 조성 - 확대 - 지역연계성 강화로 구분하여 추진, ② 국가 공통의 정책과 지역특성에 바탕을 둔 지역유형별 정책 간 조화 추구, ③ 체류인구와 지역 간 상생의 관점으로 방향 설정 필요

(기반 조성) 체류인구 육성을 위한 중앙정부의 방향과 전략

- 방문(관광개발계획), 정주(인구정책기본계획)와 같이 체류인구를 정책 대상화하여 관련 계획 수립과 지표 개발
- 일시적인 지방 이주가 가능하도록 근로, 교육 등에서 국가 차원의 시스템 재편과 관련 아이디어 발굴 필요

(확대) 체류인구 확산을 위한 중앙정부 및 지방정부의 조화로운 정책 추구

- 원도심 및 마을 중심지 내에서 빈집·빈점포 등 유휴공간, 활용이 저조한 행정자산 등을 이용하여 지역별 체류인구 유인 목적에 적합한 체류 인프라를 구축하여 체류마을 조성·정비
- 체류마을을 (가칭)체류활성화지구로 지정, 유휴자원 및 저활용 행정자산의 재생 및 활용 관련 마을 단위 서비스형 특례 적용 필요
- 개인과 기업 차원으로 체류경험 기회 제공 확대(가칭 '지역 연결프로젝트'), 광역 지자체의 서울 사무소 등을 활용한 관계내플랫폼 구축

(지역연계성 강화) 체류인구와 지역 간 관계 형성을 위한 지역유형별 차별화된 전략 구축

- (거점형) 체류인구가 관광상권이 아닌 인구감소 또는 공동화 현상이 발생하는 마을 내 머무르고, 체류마을은 스타트업 등 민간기업과 협업을 통해 지역문제 해결과 체류인구 유입이 연계될 수 있도록 공간 단위 관리모델 적용
- (계절형) 체류인구 관련 데이터 축적과 이를 반영한 계획 수립(기반시설 공급 관리) 및 체류인구와 지역주민의 접점 형성·확장
- (과소형) 실험거주 공간 조성 및 중간조직을 매개로 한 다양한 체류프로그램 도입으로 인구의 흐름 창출

로컬 지향의 흐름을 지역 활력으로 연계시키기 위해서는 지역사회에서 체류인구 유입의 필요성에 대한 공감대 형성과 체류인구 수용에 대한 준비, 제도적 정비에 대한 사회적 합의가 필수

참고문헌

박진경·이소영·조기현·김상민·임태경·김도형·조정찬·심미경·안성조. 2020. 지방소멸위기지역 지원 특별법 법안 미련 연구. 원주: 한국지방행정연구원.
보건복지부·한양대학교 고령사회연구원. 2018. 대한민국 중장기 인구정책 방향.
이상람·이지혜·Bernhard Koppen·임소정·성백선. 2018. 지역 인구공동화 전망과 정책적 함의. 세종: 한국보건사회연구원.
KT. 2021. 2019년 1월~12월 체류일수별 외지인 방문자데이터 내부자료.
행정안전부. 2022. 주민등록인구현황 행정구역(읍면동)별/5세별 주민등록인구(2011년~).
행정안전부. 2021. 인구감소지역 지정 고시(제2021-66호).

※ 이 브리프는 "안소현·이순자·민성희·김민아·전봉경·강민석. 2022. 인구감소시대, 체류인구를 활용한 지역유형별 대응전략 연구. 세종: 국토연구원" 보고서를 요약·정리한 것임.

- 안소현 국토연구원 국토계획·지역연구본부 부연구위원(shan@krihs.re.kr, 044-960-0187)
- 이순자 국토연구원 국토계획·지역연구본부 선임연구위원(sjalee@krihs.re.kr, 044-960-0250)
- 민성희 국토연구원 국가균형발전지원센터 연구위원(shmin@krihs.re.kr, 044-960-0154)
- 김민아 국토연구원 한반도·동아시아연구센터 부연구위원(minakim@krihs.re.kr, 044-960-0188)
- 전봉경 국토연구원 국토계획·지역연구본부 부연구위원(jeon@krihs.re.kr, 044-960-0303)
- 강민석 국토연구원 국토계획·지역연구본부 전문연구원(mskang@krihs.re.kr, 044-960-0170)

